

# 시·도 교육감들 “학교 질적 혁신 필요하다”

### 교육기부금 쟁점 분석·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 발표 학생 수 줄고 학급·학교 수 늘어... 수도권 집중 등 원인 미래교육 실현 필요 재원 2023~2025년 총 62조4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위해 대국민 홍보 전개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기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 산하에 정책 TF팀을 운영했다. 교육감 특약에서 발표한 교육기부금 관련 쟁점 분석 결과 및 전국시도교육청의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했다.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 명(△6.6%)이 감소했으나, 학교 수는 1만6,357교에서 1만6,710교로 353교(2.2%)가, 학급수는 23만8,958학급에서 24만3,521학급으로 4,563학급(1.9%)이 늘었다. 교사 수도 30만6,114명에서 40만15,095명으로 8,981명(2.3%)이 증가했다. 학생 수는 감소함에도 수도권 인구집중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증가했다. 특약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고, 인적 자본의 역

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미래교육 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재정 수요 부문별 세부 사업 내역은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교육여건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로 나뉘어 필요한 교육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3~2025년 총 62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교육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부모 부담 없는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 실현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 대비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 회복 지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여건 및 시설 개

선 사업으로는 △과대학교 해소, 과밀학급 감축 추진,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지속적 예산투자, △폐쇄한 환경 위해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교육기자재 교체 등이 있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교부금 특약 TF 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대학교육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범죄이력 교직원 등 비공개 처리 ‘도마위’

####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감사관 등 행정사무감사서

교육위원회 사무감사과정에서 범죄이력 있는 교직원과 소속이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비판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범죄 이력 있는 교직원과 소속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때도 알림이 오는데,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범죄 이력이 있는 교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견에 김승지 의원(비례)은 “이미 어제 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인지하지 못하

## “장애학생 학대 가해교사 위한 온라인 탄원서명은 배신행위”

###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진상규명 대책위 “전교조 전북지부 특별감사 중단 의견 뜬금없어”

“전교조 전북지부의 특별 감사 중단 의견 뜬금없다.” 전주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 브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전북지부의 은화학교 특별감사 중단 촉구 의견표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동안 전교조 전북지부가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1년 11월 은화학교 장애학생을 학대한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현 전교조 전북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이 사건 당시 가해자인 교사를 위해 온라인 탄원서명에 나서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사망사고가 나기 전년도에 특수학교 교실부족사태 해결과 입학유예학생에 대한 강제입학 철회,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인 기준 생활 인형 적용한 학년배정 철회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며 “전교조 전북지부의 중재에 따라 은화학교에 3월 입학 전까지 시설을 제대로 보강하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며 “전교조 전북지부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진정한 사과와 반성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전북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그런데 “입학한지 3개월도 안돼 장애학생 사망이라는 참사가 일어났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시 중재자로서 특수교육 담당부서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해왔는데 갑자기 전교조 전북지부가 뜬금없이 특별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와 학부모들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감사중단 요구에 대해 “조합원 교사로 아닌 학교 관리자들의 방해막이로 나서게 된 것과 다름없다”며 “특별감사 목적이 재발방지에 있고, 감사대상(피감사자)이 학교관리자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관리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과정에 대한 심리적 압박, 인사상 불안을 문제로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10.29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사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은성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정례회 개최 잇따라

###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이 1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읍·면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정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화와 현장방문을 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촉구’ 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의 시정 질문과 윤신애·최창호·한경봉·송미숙·지해춘·박광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군산=김판관 기자



“MBC 전자기 탐승 불허 통보? 안될말”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강사민 조승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소공동에서 열린 대통령실의 MBC 전자기 탐승 불허 통보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파산 직전 이른 농업인 지원 ‘한 푼도 없어’

### 권요안 도의원, 농식품국 행감서 “쌀값 폭락 따라 생존권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즉각 지원해야”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0일 농생명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쌀 수요 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37건 138,053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전북도에서 직접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총 14건 도비 251,4억 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도비 지원 재난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21년 전도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81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사회적 거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2020년,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도비 516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예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4차례에 걸쳐 도비 42억3,300만 원, 도내 등록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도비 138억4,0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도내 610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49억8,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판로감소로 어가의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명목

으로 62개 어가에 도비 29억3,800만 원을 지원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예술인, 여행업체, 운수종사자,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농민 특별 재난지원금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권요안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 쌀값 폭락,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농민들은 거의 물라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농도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농업인 대상 특별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도내 가축방역관 25명이나 부족”

### 김희수 도의원, “근무여건 개선 등 통해 조속 충원을”

동절기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가축 도내 시군별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10일 농생명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가축 전염병을 수습하고 예방할 가축방역관은 현재 39명으로 시군별 법정 적정 인력 58명 중 63%만 확보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 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순

창군 유등명 산란계 농장에서 도내 첫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돼 도내 가금류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고 양돈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유행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 인력이 23명이나 부족해 가

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더군다나 전북도의 가축 질병 방역, 축산 위생·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 등 축산업 발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수의사 인력이 21명이나 부족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희수 의원은 “도내 가축방역관을 비롯해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때 가축 방역이 이뤄지지 못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 향상을 통해 가축방역관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21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명진 의원, 동창욱 의원, 김병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9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각종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에서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창욱)에서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열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민규 의장은 “건전한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심의 부탁드린다”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군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